

[종합·해설]

■ 현장과 시각 ■

지방 우통하는 통행료 할인



채희종

시회2부 차장 시회(5월 20일) 2주일 이 지나면서 서울·경기 를 위한 제도이자 지방과는 상관없는 시책이라는 분위기가 비수도권에 번지고 있다.

통행료 할인대상은 출퇴근 시간대(새벽 5시~9시, 오후 6시~밤 10시) 20km미만 고속도로 구간 을 운행하는 차량으로 20% 감면을 받는다. 또 새벽 5시~7시, 오후 8시~밤 10시 시간대에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는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제도 쥐지는 서민 교통비 절감과 품질 정착, 교통망 분산 등이다. 언뜻 보기에 고속도로 이용 출퇴근 운전자면 누구나 혜택을 볼 것 같다. 하지만 할인 적용이 나들길 간 거리 20km 이내로 규정, 서울·경기 시흥·일산시 등을 비롯한 서울·경기 지역 운전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운전자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선 성공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남 등 지방의 경우,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자들은 운행 거리가 30km 내외여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지방 사람이 낸 통행료가 수도권 출퇴근자의 할인 혜택으로 쓰이는 셈이다. 서민들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서울 시민, 수도권 주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없는 대목이다.

특히 1주일 전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광주~목포(1시간대로) 출퇴근자들의 불만 더욱 크다.

광주와 전남도청을 오가는 공무원, 광주와 무안 남악 신도시 또는 함평 등의 지역을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은 운행거리가 대부분 20km를 넘어 통행료 감면은 그림의 떡이다.

광주~무안 고속도로 구간 중, 나주~함평(23km)·나주~무안(21km)·나주~목포(40km)·광주~무안(51km) 등 대부분 구간이 감면 혜택 범위를 벗어나 있다. 광주~나주 구간은 10km지만 지방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여서 '카풀' 효과도 없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광평성이 생명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을 고려했다면 혜택 구간을 40km 내외로 늘리거나 지방의 경우 단거리(20km) 구간 보다는 장거리(21km이상) 운행인 혜택을 주는 탄력적인 방안을 도입했어야 했다.

지방의 교통생활 특성을 간과한 정부의 실수였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다. 현 정부의 사고에는 아직도 '지방은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 6·4 재보선 결과

6·4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은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로 해석된다.

인수위 시절 영어몰입교육 파동으로부터 시작된 새 정부의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가 청와대와 내각의 인선 잡음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선·총선 대승의 잔영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민심 이반의 결과를 실감해야 했다.

◇한나라당 원파 = 선거전 초반에는 대선·총선 바람이 이어지면서 낙승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쇠고기 정국이 펼쳐지면서 한나라당은 어느 정도의 패배는 감수하는 분위기였다. 때문에 선거전부터

쇠고기 출속협상 영향... 與, 영남서도 참패

여 "결과 겸허 수용" ... 야 "국민의 뜻 실감"

'단순한 지방 선거'라며 이번 재보선에 대한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선거 직전 이명규 제1 사무부총장은 "쇠고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단체장 후보 6명 가운데 절반 정도 이겨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3곳에서 모두 패배하고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에서마저 3곳 중 1곳에서만 간신히 승리했다.

◇동 둘린 민심 = 한나라당의 원파는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 동향에서 이미

감지됐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20%대 이하로까지 떨어진 국정지지도가 이번 재보선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쇠고기 수입 장관시 관보 계재를 연기하고 자율규제 방식의 쇠고기 파동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등 몸부림쳐봤지만 들키는 민심을 다시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의 주타이 선거로 나타나면서 향후 정국 구도는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 수를 가진 여당과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반응=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며 "이 뜻을 받아들여 쇠고기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한반도 대운하 저는 물론 서민 생활, 서민복지를 침해하는 일을 단호히 막는 아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이번 선거는 국민께서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을 보여주신 것으로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과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선거 이후 민심을 더욱 살피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 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재·보선 당선자

▲후보자 성명·소속·득표수

민주=통합민주당	선진=자유선진당
민노=민주노동당	무=무소속

◇기초단체장 ★는 당선자

영광군수 정기호 (53·민주)

★ 정기호 (민주)	12,320
김규현 (무)	6,931
김연관 (무)	391
김천식 (무)	113
장 현 (무)	7,867
전태갑 (무)	610
최종걸 (무)	1,259

<4일밤 11시 40분 현재. 개표율 99%>

◇광역의원 ★는 당선자

광주 남구 1

	김선문 (47·민주)
--	-------------

★ 김선문 (민주)	7,776
서의환 (선진)	514
이승기 (민노)	3,642
강도석 (무)	1,821

◇기초의원 ★는 당선자

광주 남구 2

	남광인 (58·민주)
--	-------------

★ 남광인 (민주)	3,230
김점기 (무)	1,877
박선훈 (무)	1,758

광양시 1

	박필순 (47·무)
--	------------

★ 박필순 (민주)	1,536
조길호 (민노)	272
김성호 (무)	1,785
★ 박필순 (무)	1,873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기호 당선자(기운데)가 4일 영광군 영광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낙연 의원(오른쪽) 등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영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군민 화합... 경제 살리겠다”

정기호 영광군수 당선자

"총선을 겪어 온 군정을 수습하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정기호(53·통합민주당) 영광군수 당선자는 군민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무려 9명이 후보로 등록, 지역 민심이 크게 분열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 당선자는 또 "전임 군수의 사법처리로 인해 군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며 "하루빨리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군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정 당선자는 "군민들의 요구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당선자는 이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군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면서 "대규모 자동차 공장 및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광산업단지 건설 등에 적극 나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영광기독병원 원장, 전남도 도의원 등을 지냈다.

정 당선자는 또 "전임 군수의 사법처리로 인해 군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며 "하루빨리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군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선거 사상 첫 동수재검표 사태

강원 고성군수... 최종 동수째 연장자 당선

4일 치러진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2명의 득표수가 똑같이 나오는 선거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에 들어갔다.

4일 고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고성군수 보선 개표결과 무소속 8번 윤승근 후보와 무소속 10번 홍종국 후보의 득표수가 4천597표로 동수가 나오는 이번이 발생했다.

4일 고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고성군수 보선 개표결과 무소속 8번 윤승근 후보와 무소속 10번 홍종국 후보의 득표수가 4천597표로 동수가 나오는 이번이 발생했다. 윤승근은 "재검표에서도 두 후보자의 득표가 동수가 나을 경우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된다"며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가 당선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주내 개각명단 발표는 이미 물건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보듬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개각은 그리 빨리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요약하면 쇠고기 문제 해결과 고유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민심을 우선 수습하고 이후 국정시스템을 정비하고 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3단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

개각이 늦어지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민심 수습 개각 늦어질듯

재정부의 첫 개각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정호흡을 수습하기 위해 애초 이르면 5일, 늦어도 9일 이전에 일부 각료와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개각의 시기를 다소 늦추는 분위기다.

금주내 개각명단 발표는 이미 물건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속도조절'에 들어간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이라면 (국정수습의) 맨 마

지막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보듬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개각은 그리 빨리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요약하면 쇠고기 문제 해결과 고유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민심을 우선 수습하고 이후 국정시스템을 정비하고 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3단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

개각이 늦어지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광주화교소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광고

<ul style="list